

산재휴가 대신 개인 연차... 치료비도 사비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산업재해 사고 보고 누락 11건 살펴보니

짖은 사고 이미지 손상 우려에 '3일 이상 휴업 필요 사고' 미신고 노조 "인사상 불이익 받을까 산재 사실 확인서 제대로 작성 못해" 광주고용청, 사측 산재 신청 방해 가능성 등 은폐 정황 본격 수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산업재해 은폐 정황을 포착, 본격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다쳤는데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11건으로 이 과정에서 은폐 가능성도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 입장이다.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웠나=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이 18 공개한 '최근 5년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산재보고 의무 위반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2015년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친 3건의 사고를 보고하지 않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73조)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감독기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에도 사업장에서 3건의 사고가 났지만 감독기관에 이같은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7년에도 2건의 사고를 보고하지 않았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건씩 사업장 사고로 노동자가 다쳤지만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의 경우 A씨는 2월 3일, 세탁기 실험실에서 자재를 옮기던 중 작업장 바닥으로 떨어져 허리를 다쳤고 3일 이상 휴업을 하지 못했다. B씨는 8월 4일, 냉장고 콤팩트 베이스 밑판에 빠진 중 적재대차(화물차) 걸림턱에 왼손 엄지손가락이 베였다. 2016년 C씨는 7월 26일 자재 정리를 하다 원통형 종이용기가 찌그러지며 발목을 다쳤고, D씨는 8월 25일 노사협의회 워크숍에서, E씨는 9월 30일 사내식당 입구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모든 사고가 회사 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로 '보고의무'가 있다는 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입장이다. ◇3일 이상 근무하지 못했는데=광주지

방고용노동청이 파악한 11건의 사고 중 2017년 3월 21일 발생한 사고는 F씨가 스프링 압입기 문제를 처리하던 과정에서 기계에 눌린 손바닥을 급히 빼다 갈비뼈를 다쳤다. G씨는 같은해 11월 2일 냉장고를 전동차에 옮기다 허리를 다쳐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했다.

H씨도 2018년 10월 16일, 세탁기 내부 세제통을 청소하다 왼손이 구조물에 부딪혀 손가락을 다쳐 3일 이상 업무를 보지 못했고, I씨도 2019년 10월 29일 냉장고 판넬 적재창고에서 승강구로 들어가다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J씨도 올 들어 지난 4월, 사업장을 이동하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 발목을 접질려 부상을 입었다. 이들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73조)에 따른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사고'였으며 반드시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게 이 의원측과 한국노총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설명이다. 해당 노동자들은 모두 3일 이상 회사 출근을 하지 못했다. 이들은 개인 연차·근속 휴가를 사용했고 치료비도 사비로 부담했다. 광주 지방고용노동청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과태료(7790만원)를 부과했다.

◇왜 보고하지 않았나=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부터 삼성전자 광주지역 4개 사업장(삼성전자광주, 삼성전자㈜하남 1캠퍼스, 삼성전자인수광주(컴프제조), 글로벌기술센터 중대형금형그룹) 2896명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면서 보고하지 않은 산재 사고를 파악했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산업재해 사고를 보고하지 않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주목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임승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은폐 가능성이 있다. 산재 미보고 사건과 은폐 정황이 서로 연계되는지 엄밀하게 조사중"이라며 "사측(산재) 신청 방해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산재 사실 확인서를 인사팀에서 출력, 산업재해자에게 작성토록 하고 상급자 2명의 사인을 받아 노동부에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이 과정을 겪는 산재피해자들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될 수 있어 솔직한 산재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는 게 노조측 입장이다.

글로벌기업인 삼성이 사업장 사고가 잦은 것으로 인식되는데 따른 이미지 손상을 우려, 산업 재해를 보고하는 등 공개하지 않으려 한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임승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더 나아가 "업무상 질병 등 또 다른 산업 재해로 보이는 37건의 사고 사례도 확인,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장 근무자 중 근골격계 예방센터를 찾아 정기적 진료·검진 등을 받은 근골격계질환 의심자 37명(산재 신청자 1명 포함)를 대상으로 산재 신청 대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캠핑 즐기는 시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이후 첫 휴일인 18일 오후 나주 남평 드들강 유원지를 찾은 가족단위 휴양객들이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코로나로 집콕 늘며 증간소음 피해 증가

광주·전남 울들어 770건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활동이 늘어나면서 광주·전남에서 증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

년부터 올 8월까지 접수된 증간소음 상담 건수는 광주 1816건, 전남 1222건 등 3038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음측정을 의뢰하는 현장진단 요청도 광주 990건, 전남 57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들어 증간소음 상담 신청도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770건의 증간소

음 상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상담건수(737건)를 넘어섰고 증간소음 현장진단 요청도 올 8월까지 350건이나 들어와 지난해 전체 요청 건수(381건)의 90%에 이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로 가정에 머무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상담·현장진단 요청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추정도 나온다.

증간소음의 원인을 유형별로 파악한 결과 전국 기준, '뛰거나 걷는소리'가 65.3%로 가장 많았으며, '망치소리' 4.3%, '가

구기 는 소리' 3.8%, '가전제품 소음' 2.8% 순으로 많았다.

허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실내생활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증간소음 민원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올 6월 바닥 충격음 감소를 위해 운영해 왔던 '바다구조 사전인정제도'를 '사후인정제도'로 바꾸는 개선안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대책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무서운 택시'

술 취한 여성 승객 집 데려가 성폭행

광주광산경찰, 기사 3명 검거 적극 수사로 여죄 3건도 확인

술에 만취한 여성 승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해 신고조차 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등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광산경찰은 18일 만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택시기사 A(34)·B(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전 6시 30분께 상무지구에서 만취한 채 택시에 올라탄 여성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함께 술 마시고 집에 왔다"는 택시기사 진술에도, 피해 여성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전혀 모르는 남자 집에서 잠든 점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경찰서로 임의동행, 추가 조사를 통해 A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당시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탄 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동료와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으로 찾아냈지만, 이 여성이 피해 사실

을 기억하지 못해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광산경찰 여성청소년계 직원들은 그러나 A씨의 당황스럽고 더듬는 듯한 진술을 토대로 집중적으로 추궁, 범행을 자백받고 공범인 B씨의 가담 사실까지 확인받았다. 이후 휴대전화를 압수해 피해여성의 동영상을 찾아낸 뒤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3건의 여죄도 확인했다.

A씨가 피해 여성들의 신분증을 촬영해 놓으면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도 확인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A씨를 알고 있으면서도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 수치스러움으로 피해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재석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2팀장은 "현장에 출동했던 직원 전화를 받고 범죄 가능성을 예감해 A씨를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최근 5년간 성폭력·살인 등 특정 범죄를 저질러 버스·택시 운전면허 취소 통보를 받은 대중교통 운전기사가 광주 45명(택시 45명), 전남 28명(버스 4명·택시 24명) 등 73명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1대 총선 관련 광주·전남 150명 기소

부정선거 사범 125명으로 최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150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역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양향자·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의를 벗었고 황주홍 전 의원은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주지검(검사장 여환섭)은 18일 순천·목포·해남·장흥지청 등과 선거사범 총 286명을 입건해 14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분청 3명·지청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3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총선에 비해 입건자는 253명에서 286명으로 13% 늘었고 구속자는 9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전 본부장 A씨 등 2명이 지난 2월 노조 교육 수련회에서 특정 후보의 정책자료집을 나

눠주고 정당의 공약 영상을 상영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황주홍 전 의원은 선거구민을 상대로 33차례에 걸쳐 77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8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축조의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으로 받아들여지는 지역 정서상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 여론 조사 조작 등 기타 부정선거 운동 사범이 125명(43.7%)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사범의 경우 지난 선거 때만해도 입건자가 한 명도 없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44명이나 입건됐다.

이어 흑색선전 82명(28.6%), 금품선거 58명(20.2%), 폭력선거 및 기타 21명(7.3%) 등의 순이었다.

지난 총선 대비 흑색선전은 소폭 늘었고 금품선거는 소폭 감소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